

도내 교수들 “김 지사 무소속 출마 우려”

전북학술연구포럼, 인구 감소·새만금 개발 지연 등 민선8기 도정 실패 지적 김 지사 향해 “전북에 더 큰 혼란·분열 몰아넣을 수 있어… 미래 위해 결단을”

전북 지역의 교수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북 학술연구포럼 대표 홍성출 전북대 교수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무소속 출마 강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6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김 지사의 지난 임기 4년을 ‘참혹한 현실’로 규정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새만금 개발 지연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럼은 김 지사가 도민과 약속했던 주요 사업들의 실패를 강조했다. △인공 태양 연구시설 유지 실패 △새

만금 잠버리 파킹 ASK 데이터 센터 및 국가 컴퓨팅 센터 유치 실패 등을 언급하며, 김 지사가 약속했던 사업 중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마초를 ‘헵프’라는 명칭으로 바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특정인에게 R&D 예산을 몰아주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쓰이도록 한 행정 등에 대해서도 ‘괴이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된 ‘농부투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가 ‘젊은 청년의 대리 운전비를 준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 포럼은 이를 민주당

의 가치를 증대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과거 자유당 시절의 금품 선거를 예로 들며, “현금 살포의 선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왜 증대 범죄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대신 타 후보를 끌어들이려 사건을 몰타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전북자치도가 나후를 탈피하고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및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만금에 현대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포럼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어야 정부와 여당이 전북을 배려하는 동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이원택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김 지사를 향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더 큰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속 출마를 재고하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6일 오후 2시 전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으며, 7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북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 공천 확정 ‘군산·김제·부안갑’ 김의겸

(전 새만금청장)

“지역 최대 현안 새만금 사업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국회의원)이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전략공천했다고 6일 밝혔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 전 청장은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면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다.

김의겸 후보는 군산 출신으로 한겨레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며 물러나야 했다.

2020년 총선에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나, 전임자인 김진에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2024년 총선에선 군산지역 출마를 노렸으나 경선에서 신영대 전 의원에게 패배해 고배를 마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 14곳 중 13곳 공천을 마쳤다. 여기서는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된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보궐선거 후보는 확정하지 못했다. 원성수 전 공주에 총장과 이 지역 출신 청년 법조인에게 출마를 타진한 상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시간을 가지되 금요일(8일)을 넘기지 않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군산=김만호기자

순창군수 선거 ‘재산 의혹’ 공방 격화… 오은미 vs 최영일 정면충돌

오 후보, 최 군수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문제 제기

최 군수 “재산 증가분 등록 의무 없는 자산 처분한 데 따른 것” 해명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는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일 군수의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순창군수 선거전이 정책 경쟁을 넘어 후보 간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 오은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영일 군수 간 ‘재산 의혹’을 둘러싼 재반박과 입장표명이 이어지며 지역 정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은미 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커진 의혹 1억8,000만원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라며 최영일 군수의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지난 4월 28일 제기한 4대 의혹에 대해 최 군수가 구두 해명과 입장문을 냈지만, 핵심은 비껴간 채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후보는 공식 재산 공개 자료를 근거로 최 군수가 은행 대출 2억여 원으로 3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추가 지출했으나, 해당 자금의 출처가 재산신고 어디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

적했다.

2024년 약 3억5,000만원이던 예금잔고와 2025년 약 4억원으로 증가하고, 채무는 감소한 점을 들어 “지금 흐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수 판매와 관련해 “조경수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명백한 신고 대상”이라며 “대출 상환과 1억8,000만원 자금 출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등록 의무가 없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이라며, 자산 처분

내역과 소득세 납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 후보는 △친동생의 공유재산 무단 사용 의혹 △정정치자금 펀드 미상환 문제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등 기존에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해 순창군청 관계자에게 오은미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최영일 군수는 이와 관련하여 5일 입장문을 내었으며 다른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5일 열린 순창에 발표한 최영일 군수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이

미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검증을 거친 사안”이라며 최 군수는 아파트 구입 자금과 관련해 “재산 증가분은 등록 의무가 없는 자산을 처분한 데 따른 것”이라며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펀드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투자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반환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찾고 있고, 확인되는 즉시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동생의 공유재산 사용 문제는 “관련 부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했으며,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인출 육회 차량은 규정에 따라 재산 등록에 포함된 것일 뿐 개인 차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 군수는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의혹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논란이 군정 신뢰와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후보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순창군수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 의혹 제기와 반박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방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거가 네거티브 경쟁으로 치달기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만호기자·순창=이양원기자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

“당원추천시대 상정… 전북의 미래 설계할 해결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민주당의 ‘평당원 신뢰’를 상징하는 전북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하며 전북 정치의 새로운 서막을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사에서 박 최고위원을 내부 발탁 인재로 공식 소개하고 전략 공천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115대 1의 경쟁을 뚫고 당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이라며 “당원 주권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관을 바꿀 차세대 지도자이자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해결사”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는 단순한 지역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원택 의원의 전북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이 지역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집중된 전북의 핵심 축이다.

정치적 상징성과 경제적 잠재력이 교차하는 이곳에 젊은 리더십을 전면 배치한 것은 민주당의 미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에서부터 선거 승리의 기운을 일으키겠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고 선배 세대의 경험과 후속 세대의 미래를 잇는 든든한 해리 역할을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기자

그의 발원에는 단순한 출마 선언을 넘어 지역과 국가를 동시에 바라보는 정치적 비전이 담겨 있었다.

1987년 익산에서 태어난 박 최고위원은 상산고를 거쳐 수능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누구나 선망하는 판·검사 길 대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전주 민성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14년간 서민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의 삶은 정치 이전부터 이미 공공성을 향해 있었다. 아니스사이티 회원으로서 기부와 나눔을 실천했고, 전 주 체육회장으로서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헌신했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경쟁에서 지역의 지력을 끌어올리며 존 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그는 더불어민주당 112만 당원의 선택을 받아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썼다.

조직원 아닌 사람으로, 계파가 아닌 신뢰로 올라선 그의 정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다.

이번 민주당의 박지원 최고위원의 전략 공천은 단순한 후보 지명이나 ‘누구나 정치’의 후면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자, 전북 정치가 과거의 틀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에 신선한 정치인이 전략 공천되므로 해서 평당원에서 시작된 한 정치인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전북의 시선이, 나아가 정치권의 시선이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만호기자

“멈춰선 부안, 더 기다릴 수 없어… 군정 모든 것 걸겠다”

김종규 전 부안군수, 무소속 출마 공식화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전 군수는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의 현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군민의 절박한 뜻을 받들어 비장한 각오로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안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전 군수는 “부안 인구는 4만7,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청년들은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현실이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재정자립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차립 기반이 취약한 구조가 8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 병적인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제는 누군가가 이 현실을 직시



하고 군민에게 정확히 말해야 할 때”라며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부안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군수는 자신의 재임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정책 실행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전력 자립 기반 구축 △천원버스 도입을 통한 교통비 절감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군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물”이

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부안의 미래를 고민하며 축적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은 그 경험을 다시 부안에 쏟아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특히 부안의 미래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조했다.

이어 “무능한 리더십과 사익 중심의 정치로는 이 기회를 결코 잡을 수 없다”며 현 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부안의 재도약을 위한 AI 기반 농업 혁신, 부안에너지공사 설립,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0세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군수는 “군민이 행복하지 못한 시간은 이미 충분히 길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군정의 모든 것을 걸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규 예비후보는 2002~2006년과 2014~2018년 두 차례 부안군수를 역임했다. /이만호기자·부안=김석진기자

민주 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북특별자치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 결과를 6일 공식 발표했다.

전북도당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북도당 컨퍼런스룸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00%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투표 결과 1순위 윤해아(27), 2순위 박수형(36), 3순위 강정희(59), 4순위 박병철(57), 5순위 안용주(59), 6순위 송승룡(50)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이번 순위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윤해아 후보의 1순위 선정이다.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정치에 적극 반영하려는 권리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비례대표 의석은 총 6석으로, 최종 당선 여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익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후보, 재선 도전 선언



오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시장의 핵심 덕목으로 리더십과 통찰력,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환경부가 지역 대표 기업인 하림 익산공장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수천 명 노동자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고려해 이를 거부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본인은 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고통을 겪었지만 시민과 강을 지켜낸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더는 위기 앞에서 도망쳐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정치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을 다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